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 주간 북한경제 동향

##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9년 1월19일(월)  
통권25호(제2권 제3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 한계와 방향성을 보여준 2008년 남북경제협력

10년만에 보수세력이 집권한 2008년은 남북경협에 우려와 기대를 함께 주면서 시작했다. ‘피주기론’을 비롯해 평소 대 북 강경론을 피왔던 보수세력의 집권이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비즈 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는 기업 CEO 출신 대통령이 정경분 리 원칙을 지킨다면 오히려 남북경협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했다.

북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2007년 후반기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유력하면서부터 북한은 이 후보에 대한 개인 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 또한 당선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통일부 폐지’, ‘PSI 참여 검토’ 등을 언급했을 때조차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조심스런 ‘기 대’의 표시였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 뒤에 우려와 경계의 뜻도 분명히 드러났다. 2008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경제 운영의 주체는 내각’라고 하 면서도 예년과 달리 ‘경제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조했다. 보 수적인 한국 정부의 출범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반영이라고 보인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경제협력이 위축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내부 단속을 하려는 것이다.

마침내 침묵을 깨고 북한이 반응했다. 개성공단에서 남측 당국자를 ‘철수’ 형식으로 ‘추방’했고, 당국간의 채널을 폐쇄 했다. 그리고 남측의 의도적 무시와 북측의 격한 대응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마침내 2009년 1월 17일 북한은 “전면대 결태세 진입”을 발표하여 무장충돌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남북경협 또한 악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개성공단에 설치돼 있던 경협사무소가 사실상 폐쇄된 이 후 업무 협의를 하려면 예전처럼 다시 중국의 북경이나 단둥 을 이용해야 했다. 오전 출경이 금지되면서 개성공단에서 생 산된 제품은 오전 출하가 불가능해졌다. 더욱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한 12·1 조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개성공 단 폐쇄’로 이해돼 88년 이후 20년 넘게 이어온 남북경협사 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주었다.

결국 2008년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 당국이 정경분리의 원칙에 철저히 않는 한 남북경협은 원천적인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역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남북경협은 여전히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하다.

우선 남북관계 경색은 물론 세계경제 침체 등 사업 여건 이 최악인 상태에서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기존의 남북경협은 예년 수준은 유지했다는 점이다. 남북경협의 리스크 노출로 추가적인 투자는 타격을 받고 있지만 기존의 협력 수준은 유

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예를 들어 2008년 남북교 역 규모는 18억 2,037만 달러로, 2007년 17억 9,789만 달러와 비교할 때 1.2% 정도 증가했다. 또한 12·1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개성공단의 경우도 2008년 1월 1,887만 달러 수 준이었던 월간 생산액은, 10월 2,31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 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속에서도 이러한데, 정상적인 상황이 라면 어떠했을까?

다음으로 남북경협, 특히 그 중에서도 개성공단이 남북관 계의 파국을 최소화하는 지렛대임이 입증된 한 해였다. 예상 보다 높았지만 12·1 조치조차 개성공단의 공식적인 폐쇄를 담 지 못했다. 살라미 전술로 볼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물론 국제사회의 투자 유치에 결 정적인 악재임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의 곤혹스러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2008년은 남북경협이 강화될수록 남 북관계의 파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가 현실에서 확인 된 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2008년의 경협이 남북경협에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남북경협에 내재된 한계가 여실히 확인된 만큼, 그 에 대한 해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민족으로 동반자이자 체제 대립을 하고 있는 사이임을 부인할 수 없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내재적 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사업 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개성공단 내 B기업에서 발생했던 노사 문제의 사례는 확대되고 있는 남북경협만큼이나 남북간 합의 된 노사규범의 제정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보여준다.

또한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남측 기업 단독 투자는 투 자의 위험성은 물론 북한의 기피도 우려된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국가의 기업 과 함께 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진항 개발 을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철도공사와 조인트벤처를 만들고 있 는 (주) 루코의 사례나 대만 정부가 본토 투자를 제지했을 때 홍콩 등을 통해 우회투자를 했던 대만 기업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간 불신의 골이 깊어질수록 남북관계 경색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역시 직간접 적인 리스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남북경협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해빙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정치적인 신뢰 회복이 필 수적이다.

필요한 것은 기싸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 ▶제25호 목 차

### 이주의 칼럼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 2

### 이주의 주요 기사

북한에서는 환전을 어떻게 할까 ----- 3

美 국무부 “민간단체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은 계속” ----- 4

“개성공단 입주들, 기업외지 감소” ----- 5

“北 올해 식량 100만t 부족”<전문가>----- 6

베에텔, 北 이통시장 진출 추진 ----- 7

북, 오바마 취임 앞두고 ‘위협전술’ 재연----- 8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정상 진행 ----- 9

[北 대남대미 압박 왜] 긴장감 조성... 대북정책 전환 노려 ----- 10

NKorea to crack down on markets to stem imports----- 11

總書記義弟を中心に…北朝鮮、集團指導体制を準備か ----- 11

추천논문 / 북한 경제체제의 복합적 딜레마와 미래 전망 ----- 12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 12

###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 ●국제한민족재단 러시아 대사 초청토론회

▶주제 : 2009 한러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전망

▶일시 : 2009년 1월 21일(수) 07:30

▶장소 : 롯데호텔 에메랄드룸(2층)

#### ●중앙대민족통일연구소 2009제1차정책토론회

▶주제:북한 김정일 건강 이상과 후계자 문제

▶일시 : 2009년 1월 21일(수) 14:00

▶장소 :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세미나실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대외정책 콜로키엄

▶주제 :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동아시아와 한국을 중심으로

▶일시 : 2009년 1월 23일(금) 15:00

▶장소 : 경희대 본관 대회의실

#### ●북한법연구회 제137회 월례발표회

▶주제 :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의 토지 소유와 상속문제

▶일시 : 2009년 1월 29일(목) 18:30

▶장소 : 뉴국제호텔 두메라룸

### 이 주의 칼럼

##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김현경(MBC 북한전문 기자)

이건훈 씨를 처음 만난 건 2006년 봄이었다. 금강산이 있는 북한 고성 금천리. 이건훈 씨는 금천리에 밤나무 숲을 조성하기 위해 부여에서 올라왔다. 금강산을 그저 설악산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우리 관광지로 여겼다. 그래서 밤에 통행금지 시간에 맞춰 서둘러 온천장에서 내려오면서 맘대로 놀지도 못하게 한다면서 투덜거릴 수 있었다. 그 관광 철책 밖 군인들이 오가는 야산을 겁도 없이 혼자 누비면서 밤나무 묘목을 심을 수 있었다. 그때는 그랬다.

2008년 7월 11일. 관광지 해수욕장을 걷던 50대 여인이 북한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금강산을 오가는 길이 사실상 막혀 버렸다. 이건훈씨는 한 달을 기다려 어렵게 방북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8월 19일 저녁,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다. 아들은 가슴을 쳤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을 쏟은 금천리 밤나무들을 이제 자신이 돌봐야 하지만 그곳에 갈 수 없음을 애도해했다.

한 시라도 잊은 적이 없었던 혈육.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겠다고 적십자사에 상봉 신청을 한 이산가족은 11월 30일 현재 127,323명이다. 하지만 그중 30%인 38,249명은 가족들을 기다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상에 남아 있는 신청자는 89,074명.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만날 수 있을지, 아니 살아남으면 기회가 올 것인지조차 기약할 수 없다.

이산가족상봉이 사실상 정례화 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16차에서 멈출 줄은, 그리고 완공된 면회소에 이산가족들이 가지 못하게 될 줄은 그 때는 정말 알지 못했다.

2002년 9월,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 인민군은 경의선과 동해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평화의 회랑이 생겼다. 하루에도 통문은 20여 차례 씩 열렸고, 그 문을 통해 사업가와 일반 관광객들이 2천 명씩 들락거렸다. 강원도 최북단 南 고성읍에는 관광객을 겨냥한 식당과 상점이 호황을 누렸다. 이들은 지금 겨울 해변에서 한숨만 짓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에서 남쪽 손님들을 맞던 北 고성군의 북한 종업원들도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변화의 뒤에는 남북의 협상 일꾼들이 있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때로는 탁자도 두드리고, 때로는 위협도 하고, 때로는 설득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각각 남과 북으로 돌아가서는 내부의 반대 의견을 상대해야 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남쪽에서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지난 정부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있듯이 요즘 북한에서도 ‘남조선의 속셈’을 간파하고 ‘인민들에게 환상과 의존심’을 심어준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총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故 이건훈씨가 심어놓은 밤나무에 부여 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 날을 꿈꿀 수 있을까?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로 유라시아의 대륙까지 물자가 오가는 그 날, 남북의 군대가 다시 교류와 화해를 보장해 주는 날, 이산가족들이 면회소에서 더 많이 더 자주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날,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남북이 민족의 이익을 바탕으로 손을 잡고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원문은 [http://www.kcrc.or.kr/?doc=bbs/gnuboard.php&bo\\_table=z\\_column\\_1&page=1&wr\\_id=40](http://www.kcrc.or.kr/?doc=bbs/gnuboard.php&bo_table=z_column_1&page=1&wr_id=4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환전을 어떻게 할까

-- 1월 12일 노컷뉴스

북한에서는 고려은행과 무역은행, 외화교환소 등에서 달러를 북한돈으로 환전할 수 있으나, 북한돈을 달러로 교환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북한방송의 열린북한통신은 15일 준비호에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려은행과 무역은행 등 은행과 호텔 안에 있는 환전소 등과 지하외환시장(암달러) 등 3군데로 암시장을 제외하고는 달러를 북한돈으로 바꿀 수 있지만 북한돈을 달러로 환전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합법적인 환전소에서는 각기 다른 기준의 공식환율을 사용해 사실상 이중환율제도로 운용되고, 불법적인 환전소에서는 각국의 실질 화폐가치를 반영하는 비공식환율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경제규모가 작아 환율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1월 현재, 북한의 고정환율은 1달러당 250원 정도이다.

고려은행, 무역은행이나 호텔 등에서 환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에서 결정하는 고정환율은 북한 화폐의 가치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이 기준대로 환전하면 큰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호텔의 출입 등 외국인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계산은 환전 없이 외화로 직접 결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열린북한통신은 “외화상점이나 수매상점 앞, 장마당 등에 위치하고 있는 외화 암시장은 개별거래자의 외화매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각국의 실질 화폐가치를 반영해 2009년 1월 현재 비공식환율은 1달러당 3540원 정도라”고 전하고 “비공식환율은 북한의 지하민간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점 북한의 대표적인 환율로 인식되고 북한 원화를 외화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北, 국제기구와 AI예방 협력 강화” <RFA>

-- 1월 13일 연합뉴스

북한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한 여성이 AI로 사망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AI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AI 예방사업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AO의 아시아 지역 조류독감 관찰 책임자인 모가리아

습하시의 13일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FAO는 북한이 AI를 정확히 진단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고 필요한 장비도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 정부도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있고 AI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빨리 대응하기 위해 교육도 받는다”고 밝혔다.

습하시의 “북한이 중국의 가금류를 대규모로 수입하지 않아 AI 전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매년 12월과 1월에 AI 바이러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은 두달전 7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집트에서 열린 AI 예방과 대책 국제회의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WHO의 한 관계자도 “북한이 WHO가 주관하는 전염병학 연수 과정에 참여하고, 조류독감 전염병 예방계획을 세우고 WHO의 평가를 받는 등 AI 예방사업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WFP “북한 대부분 지역 배급 끊겨”

-- 1월 13일 노컷뉴스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북한 내 대부분 지역에서 배급이 중단됐다면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 재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 방콕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12일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현재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배급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아돔과 산모, 수유모에게만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즐리 대변인은 지난해 10월까지만 정상적으로 식량을 배급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나눠줄 식량이 없어 북한 내 WFP 활동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리즐리 대변인은 “지난 9월 대북 식량 지원 사업 확대에 맞춰 북부 지방에 현장 사무소들을 새롭게 설치하고, 분배 감시 요원들이 사용할 자동차들을 대거 구입했으며,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식량가공 공장들을 확충하고 물류시설을 정비했지만, 이 모든 것이 현재 무용지물 상태”라고 말했다.

리즐리 대변인은 “분배할 식량과 운영 자금이 확보되지 못하면 세계식량계획은 곧 분배 감시요원들의 숫자를 줄이고 북한 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식량계획은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5억 3백여만 달러를 모금하기로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목표액의 3.8%인 1천9백26만여 달러 밖에 확보하지 못해 이미 약속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을 간곡히 호소했다.

## 北, 명산·특산물 605종 지정

-- 1월 13일 연합뉴스

북한은 산나물, 산열매, 약초, 곡물, 채소 등 지역별 명산물과 특산물을 모두 605종 지정, 보호·이용하고 있다고 북한의 격월간 과학학술지 '과학원통보' 최근호(2008·6호)가 보도했다.

13일 입수된 과학원통보는 2007년 말 제출된 '우리나라(북한) 명산물, 특산물의 지방적 분포 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 황해북도(102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함경북도(66종), 평안남도(65종), 평양시(각 62종), 강원도(57종), 평안북도(56종), 함경남도(54종), 량강도(42종), 자강도(36종) 순이라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명산물이 456종(75.4%), 특산물이 149종(24.6%)이나, 지방별 명산특산물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다.

논문은 또 산나물, 산열매, 약초, 기름나무, 어류, 오징어, 조개, 게, 해초, 야생짐승, 약수, 샘물, 광물, 새우, 해삼, 조류, 파충류 등을 "자연적인 것"으로, 알곡(곡물), 과일, 남새(채소), 감자, 약초, 공예작물, 양잠식물, 누에고치, 음식, 양어, 양식 해초, 집짐승, 약재, 의약품, 천, 신발, 도자기, 일용품, 건재류 등을 "인공적인 것"으로 분류해 각각 166종과 439종이라고 소개했다.

자연적인 명산물, 특산물은 어류가 35종으로 가장 많고 산나물(24종), 조개(17종), 야생짐승(16종), 게(12종), 약수와 기름나무(각 10종) 순이다. 어류는 평안북도(10종), 야생 짐승류는 북부 산간지대인 량강도(10종)에 집중 분포됐고, 산나물은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평안남도, 조개는 평안북도, 함경북도, 강원도에 많다.

## 북한 '사설시장' → 10일 농민시장' 주민 눈치만

-- 1월 13일 노컷뉴스

북한당국이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시장을 '10일 농민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격정돼 눈치만 실패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가 전했다.

대북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NK in&out' 8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시장을 '10일 농민시장'으로 전환해 공산품은 국영상점에서만 판매한다는 북한 당국의 지침이 발표됐으나, 각 지역의 행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추진방식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시 사동구역 행정위원회 행정과에서는 지난해 연말 1주일 정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시장을 막으면 장사꾼들이 모두 거리로 밀려 나와 주민들과 전쟁이라도 치러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우세하면서 논의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당국의 지시가 내려오긴 했지만 이 문제를 강력히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다고 전했다.

평양시의 각 동(洞) 국영상점들도 국가 공급품이 들어오지 않아 여전히 개인, 시장, 공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되파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모든 공산품을 국영상점에서 판매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美 국무부 "민간단체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은 계속"

-- 1월 14일 노컷뉴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식량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의 손 매코맥 대변인은 13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지원만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요원에 대한 비자 문제로 중단되고 있을 뿐 미국 내 5개 민간단체를 통한 식량 지원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를 위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요원의 배치를 놓고 북한 당국과 빚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를 통해 2만 1천 톤의 식량을 실은 6차분 선적은 지난 8일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했으며 5천 톤 가량의 7차분 식량에 대한 출항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하기호 한 식량 50만톤 가운데 6차례에 걸쳐 16만 4천330톤을 지원했다.

## 정세균 "李대통령, 대북 식량지원 나서야"

-- 1월 14일 노컷뉴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식량 지원을 빨리 실천하는 게 옳다"며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번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만났을 때도 '당파를 초월해 남북 문제에 대해선 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해가 바뀌어도 실천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9월부터 배급이 중단될 정도로 북한의 식량 난이 심각하다"며 "정부는 상황을 파악한 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인도적 식량 지원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 “개성공단 입주들, 기업의지 감소”

-- 1월 15일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 및 입주 예정인 업체 95개사중 76%는 “현 남북관계 경색이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정화 분위기 유도’를 최우선 지원 대책으로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개성공단기업협의회(회장 문창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부터 사흘간 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당면 애로 사항으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장래 불안감 확대’(39.1%)와 ‘통행, 통관, 통신상의 애로’(27.2%)를 1, 2위로 꼽았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어려움중에선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불안심리의 확산으로 인한 ‘기업활동 의지 감소’(55.4%)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이어 자금조달난(20.7%), 바이어 이탈과 주문량 감소(6.5%) 순으로 지적했다.

이 조사가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 등 12.1 조치 이전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불안감과 애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문창섭 회장은 1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남북경협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실제 12.1 조치로 납기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남측 관리자들의 체류인원 제한으로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교육이 어려워졌으며, 협력업체들의 심리적 동요로 기초 원부자재의 안정적 조달이 곤란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지난해 생산액은 외형으로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나 북측 노동자가 90%이상 늘어나고 가동기업이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론 생산액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로 바이어들이 주문을 축소하거나 취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성공단에는 지난 연말 현재 93개 기업이 입주, 남측 근로자 1천501명과 북측 근로자 38,931명이 일하고 있다.

문 회장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진출 국내기업과는 달리 개성공단 기업들은 국내 3천60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 및 소모품 전량을 공급받고 있으며, 건축업체를 포함할 경우 약4천600여개가 개성공단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경기침체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반 확충에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개성공단에서 1만2천명의 인력이 부족해 개성이외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설을 지원해 지금 당장 착수해도 내년 중반에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남북경협교류회 김정태 회장도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남북경협이 이뤄진 지난 20년간 정부차원에서

만 8조2천여억원을 지원 또는 투자했고 지난해 남북한 반출·입 총액이 100억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남북경협의 위상이 안정되기는 커녕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北 ‘투 트랙 전략’ 먹힐까

-- 1월 15일 서울신문

북한이 오는 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에는 관계정상화를, 한국에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촉구하는 등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통적 통미봉남(通美封南)보다 필요에 따라 한·미를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핵 6자회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 북한은 지난 12일 불능화 조치 중 하나인 사용전 연료봉 처리를 위해 15일부터 우리측 당국자와 기술자로 구성된 실사단 방북을 허용했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북한이 다음주 오바마 대통령 취임에 앞서 남북 회동을 통해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다.”며 “사용전 연료봉에 대한 실사를 계기로 지연되고 있는 대북 에너지 지원을 촉구하고, 검증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방북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측 핵심 당국자에 대한 첫 평양 초청이라는 점도, 북측의 이같은 의도를 예상케 한다.

남북 관계는 냉각됐지만 6자회담을 통해 우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받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북한은 지난 6월과 9월 판문점에서 열린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에 현학봉 외무성 부국장을 대표로 보내 에너지 지원을 촉구하고 미국식 검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며 “에너지 제공이 지연되면 사용전 연료봉 처리 문제는 물론, 불능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北 계속 ‘왕따’시키면 2006년보다 더 위험해질 것”

-- 1월 15일 노컷뉴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확실한 근거 없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조치는 실수였다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카로스 파스큐엘 부소장이 밝혔다.

파스큐엘 부소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가 여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대북 개입을 중단한 조치는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파스큐엘 부소장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이후 영변 핵 원자로에 대한 국제기구의 감시가 중단됐고 결국 그 원자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한 플루토늄이 생산됐다”고 설명했다.

파스큐엘 부소장은 “북한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을 증명해왔고 핵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안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요원을 비롯한 외국 감시단을 주둔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파스큐엘 부소장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특히 중국과 같이 북한에 경제적 지렛대를 가진 주변국과 조율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 없어 다루기 어려운 나라”라면서 “앞으로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지만 단순히 북한을 배척하기만 하면 지난 2006년 목격한 바와 같이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北 올해 식량 100만 부족”<전문가>

-- 1월 15일 연합뉴스

북한의 올해 식량 자체 공급 능력은 420만 내외여서 최소 소요량 520만에 비해 100만가량 부족하다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이 15일 전망했다.

권 위원은 이날 오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2009년 북한 주민의 쌀독 상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통상적인 상업적 수입량을 감안하면” 40만 내외가 실제 부족량이라며 한국이 예년 수준인 40만을 북한에 지원한다면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이 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차관 및 비료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대북 식량 차관을 무상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 지난해 발표하고 이를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으나 “무상지원은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방식,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평가가 따르지 않을 경우 역작용이 더 큰데, 현 상황에서 남북한이 이같은 여러 조건에 합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권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무리하게 무상지원을 추진하기보다는 분위기가 성숙할 때까지 기존의 차관형태 지원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현 상황에서 굳이 무상지원을 추진코자 한다면 직접 지원보다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시장을 강력 통제하면서 국영 유통망을 통한 물자 공급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권 연구위원은 “시장을 통제할 경우 주민의 시장활동 기회가 줄어 가계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데 반해 암시장을 비롯한 시장의 식량가격은 상대적으로 더욱 올라가 특히 도시민의 식량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소식통 “北 김정일, 3남 정운 후계자 지명”

-- 1월 16일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인 김정운(1984년생)을 낙점하고, 이러한 결정을 담은 ‘교시’를 이달 초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보 소식통은 15일 “김정일 위원장이 1월8일께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세번째 부인 고 고영희씨에서 난 아들 정운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교시를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조직지도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 김 위원장의 결정 사항을 전달한 데 이어 각 도당으로까지 후계관련 지시를 하달하고 있으며, 고위층을 중심으로 후계자 결정에 관한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운이 후계체제를 확실히 구축해 권력을 이어 받으면 북한은 세계 현대사 초유의 실권자 3대 세습국이 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32살이던 1974년 2월 노동당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 정치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인됐으나 정운은 이보다 7살 어린 나이에 북한 정치권력의 후계자로 지명된 셈이다.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후계자 낙점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조직지도부 등 고위층에서도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라며 “정운의 내정 사실을 아는 권력층에선 그에게 줄을 서는 상황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북한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 결정에는 상당히 회복되기는 했으나 지난해 중반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김정일 위원장의 ‘조바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군부대와 공장·기업소 등을 잇달아 시찰하며 건강을 과시하고 있으나, 와병 충격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피로하고 노쇠한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운이 후계자로 결정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와병 이

후 권력 2인자로 급부상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김정일 위원장의 매제, 정운의 고모부)이 ‘후계자 후견인’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정운은 90년대에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평양으로 귀환해 2002년부터 2007년 4월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학(5년제)을 다니며 “주체의 영군술(領軍術)”을 중심으로 배웠으나 노동당이나 군에서 특별한 공직을 맡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평양 ‘제주흑돼지 농장’ 건립

-- 1월 16일 한국일보

북한 평양에 제주흑돼지농장을 건립된다. 15일 제주도 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2007년 11월 제4차 제주도민 평양방문 당시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교류협력증진 방안으로 처음 논의했던 ‘남북 흑돼지 사육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억 2,000만원 상당의 양돈장 내부기자재를 16일 북한 보낸다.

이 사업은 그 동안 금강산 피격사건 등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연돼 오다 지난해 9월 북측의 요청으로 제주도 관계자 등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민족화해협의회와 논의하는 등 3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이뤄지게 됐다.

양측은 12월 12일 중국을 거쳐 팩시밀리로 교환한 합의서에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리 평양돼지공장 분만시설 3개동에 내부기자재 및 제주흑돼지 공급 사업을 진행하며, 2009년 상반기중에 사업 완공을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1단계로 제주흑돼지농장이 설치될 평양 양돈장 1개동에 분만틀과 사료통 등의 기자재들을 보내고 4~5월께 제주농가들이 기증한 흑돼지 100마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 베에텔, 北 이통시장 진출 추진

-- 1월 16일 오라뉴스

베트남 3대 통신회사 중 하나인 비에텔이 북한 진출을 추진 중이라고 관영 사이공해방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비에텔은 투자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은 주민에 대한 내부 감시망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전화 통신망 확대를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난달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이 처음으로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편, 베트남 국방부가 운영하는 비에텔은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에도 진출해 각각 10만명, 5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했다

美 CIA, 北 권력층·내각 63명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

-- 1월 16일 국민일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새해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권력층과 내각 명단 64명을 새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난 12일 작성한 명단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노동장 총서

북한 주요 권력층 및 내각 명단

노동당총서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리영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노동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
총리	김정일
농업상	김창식
상업상	리용선
전력공업상	허택
재정상	문일봉
수산업	심기엽
외무상	박의춘
임업상	김광영
철도상	전길수
금속공업상	김태봉

(CIA 1월 12일 공개)

기, 인민군 총사령관 등 3개 직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와병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통치하는 최고권력자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특별히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살아있다고 본다”면서 “북한 정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서열 2위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노동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최고권력층의 이름도 여전히 올라있다. 김정일의 사촌매부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도 건재하다.

그러나 김정일 와병설 후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매제이자 노동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은 CIA의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아 관심을 끈다.

지난 6일 우리나라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대로 일부 각료들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각료들이 교체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22일 작성한 명단과 비교해 보면 농업상인 리경식에서 김창식으로 전력공업상은 박남철에서 허택으로 바뀌었다. 또 임업상은 석근수에서 김광영으로, 금속공업상은 김성현에서 김태봉으로 교체됐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상(전길수) 상업상(리용선) 수산상(심기엽) 재정상(문일봉) 등은 지난해 9월 명단에서 아직 변함이 없다.

### 남광토건, 개성공단 생산 철구조물 첫 반출

-- 1월 17일 파이낸셜뉴스

남광토건은 북한 개성공단 철골공장에서 생산하는 철구조물 500t을 대경기계기술의 전남 여수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남광토건이 북한에서 생산한 철골구조물을 남한으로 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남광토건의 개성공장 현지법인인 남광엔케이는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대경기계기술 여수 공장 신축공사에 쓰일 철구조물 500t을 납품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출하를 시작했다.

남광엔케이는 남광토건이 2007년 8월에 설립해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민간공장의 건축공사와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의 철구조물을 생산해 왔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에서 만든 철골생산품이 북측에서 남측으로 첫 출하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성공단 철골생산품이 남측으로 출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교역 20년간 누적액 100억 달러 돌파

-- 1월 17일 동아일보

1989년 이후 지난해까지 20년 동안의 누적 남북교역액수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금강산과 개성 관광 인원도 2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 액수는 2007년보다 1.2% 늘어난 18억2000만 달러로 1989년 이후 누적액수는 110억1500만 달러였다. 지난해 북한 당국이 남측과의 정부 간 관계를 단절하면서도 민간 경제협력 사업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남북교역 중에는 상업적 거래가 17억1877만 달러로 전년보다 19.6% 증가하며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서 반입과 반출이 전년보다 83.5%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금강산과 개성 관광이 중단됐지만 1998년 이후 누적 관광객은 각각 193만4662명과 11만2033명, 총 204만66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광객을 제외한 북한 왕래 인원도 18만6775명으로 전년보다 2만7561명 늘었다.

지난해 정부와 민간의 대북 지원금은 1160억 원으로 전년보다 73.6% 줄었지만 1995년 이후 누적 액수(경수로 등 핵문제 관련 제외)는 3조778억 원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

#### 北 “대미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

-- 1월 17일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관계정상화가 이뤄져도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가진 문답에서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의 문제”라며 “설사 조(북)·미

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해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조·미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지키기 위한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선반도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 핵무기 대 우리 핵무기 문제”라고 밝혀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한에 대한 불가침이 확실한 상황에서만 핵포기가 이뤄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핵억제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조선반도의 현실”이라며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도 수십년을 살아왔고 지금도 끔찍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조·미관계 정상화를 우리 핵포기의 대가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나 경제지원 같은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선 핵포기, 후 북·미관계 정상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관계정상화를 마치 우리에게 주는 선사품인 것처럼 여기는 미국의 대국주의적 근성의 발로이고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 북, 오바마 취임 앞두고 ‘위협전술’ 재연

-- 1월 17일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화려한 위협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과 오후 외무성 대변인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내세워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 메시지’를 보냈다. 우선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가진 문답에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라며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관계정상화가 이뤄져도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이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의 최근 발언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힐러리 내정자는 13일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부시행정부의 ‘선(先) 핵포기·후(後) 관계정상화’ 정책을 계승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힐러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날 ‘비핵화보다

북미관계정상화가 먼저라고 주장한 바 있어, 지금의 형국은 북한의 입장에 미국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북한이 이를 재반박한 모양새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의 선후 관계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일종의 기선잡기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에서도 핵문제를 포함한 북.미 간의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감케한다.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는 행동 대 행동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북한과 미국 모두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입장 표명은 신경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바마 정부가 경제위기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문제, 중동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속에 오바마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신경전은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낳기도 했던 오바마 정부에서도 북.미 간에 지루한 줄다리기는 변함없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힐러리 내정자의 발언 등으로 미뤄볼 때 오바마 정부도 북한과 이른바 ‘통 큰 협상’을 하기보다는 부시 정부와 같은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단시일 내에 북미관계에 있어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의 남측에 대한 메시지는 보다 위압적이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은 남북 관계의 현상화를 ‘대결국면’을 규정한 뒤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면대결태세 진입’이라는 표현 속에는 북한이 앞으로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할’ 물리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결의가 느껴진다.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총참모부 대변인도 “우리 혁명적 무장력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이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위협전술과 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일감 없어 수백명 무급휴가”

- 1월 18일 경향신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8일 “개성 공단에 일거리가 없어 북한 직원들을 수백명씩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경제 위기로 대기업 납품이 줄어든 데다 북한의 통제까지 강화돼 입주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계 제조업체 로만손 대표인 김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초대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회장을 맡았다.

김 회장은 “(출입을 제한한)북한의 12:1 조치 이후 납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로 주문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80~90%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김 회장은 “정치적 요인으로 기업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없어야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위험 회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 소송과 관련해 김 회장은 “가처분 소송 준비 중소기업체들에 은행이 잔여 계약금의 조기 청산이나 전체 여신 회수 등을 거론하며 소송 포기를 압박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5개 기업은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 준비에 들어갔으며 소송을 검토하는 업체들의 문의도 중앙회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205개 기업 가운데 약 120개는 키코 계약 무효를 위한 본안 소송장까지 제출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김 회장은 “관치 금융 부활이라는 비난을 듣더라도 감독당국이 강력한 이행 점검과 창구지도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정상 진행

-- 1월 19일 파이낸셜뉴스

북한 군부의 대남 전면 대결태세 성명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은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개성을 포함한 전체 북한 지역 내 체류 인원은 740명으로 개성, 금강산 지구에 현재 600여 명의 우리 인원이 체류 중”이라며 “특이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6자회담과 관련한 실사단이 현재 평양에 체류 중이고 3개 기업의 총 24명이 평양 지역에 체류 중”이라며 “북핵 실사단은 아마 오늘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1998년 12월 2일에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이 있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강경 입장 및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 등을 북측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선별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당시 성

명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시 북한 성명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은 현재 연례적인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평소 훈련수준 이상의 특별한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과거의 자료지만 현재 상황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 대남·대미 압박 왜] 긴장감 조성... 대북정책 전환 노력

-- 1월 19일 서울신문

북한이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군사적 대응조치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고수 등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시사하고,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을 상대로 북·미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새해 들어 남북 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에 앞서 북한이 대남·대미 공세를 높여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 군부가 서해상 재충돌이 우려되는 수준의 대남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난해 12월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차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2·1’ 조치 이후 남측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당시 12·1조치를 ‘1차적 조치’라고 강조, 추가 조치를 시사했었다.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육로 통행 차단에 의한 개성공단 위협 등에 이어 서해상 충돌 가능성까지 내놓으며 북한 군부가 대남 압박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 등을 통해 남측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고강도 압박을 통해 남측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환해 보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한반도 정세를 불안케 함으로써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측의 관심을 유도하고 제대로 대응하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측은 그동안 북방한계선(NLL)을 부인하면서 NLL 이남 해상으로 선포한 자신들의 해상군사분계선 고수를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북측이 경비정을 NLL 남쪽 수역으로 출동시킬 경우 ‘제3의 서해교전’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북 양측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함정간 무선통신망(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서 북측의 응답률이 저조해지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태다. 해상에서의 사소한 움직임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셈이다.

북측이 위협 수위를 대폭 높인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무력 충돌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러나 우리측의 반응을 지켜본 뒤 추가적인 움직임 가능성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북한은 지난 13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이어 17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문답을 통해 오바마 미 신 행정부를 상대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보다 북·미 관계정상화가 먼저’라던 북측은 미국측이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6자회담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받아치자 이제는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라며 미국측을 다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Clinton promises to renew U.S. leadership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리더십을 새로이 할것을 약속하다

-- 1월 13일 CNN

출처: <http://edition.cnn.com/2009/POLITICS/01/13/clinton.confirmation/?iref=hpmstpop>

Sen. Hillary Clinton told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on Tuesday that she aims to “renew America’s leadership” in a world that has undergone an “extraordinary transformat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is now facing “great peril.” ……

The biggest danger to U.S. security, Clinton emphasized, is th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ill fall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For that reason, she asserted, she favors a “tough, reality-based approach to North Korea” as the best way to minimize or eliminate the regime’s role as a proliferator of deadly weapons and nuclear technology.

While Clinton supports the six-party talks as “a vehicle for us to exert pressure on North Korea in a way that is more likely to alter their behavior,” she also said that she is under “no illusions” about the scope of the challenge presented by the rogue regime. She indicated that the entire “record of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up to this date” is under review.

Clinton also stated, however, that the talks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provided a unique opportunity for bilateral conta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 regime once labeled by President Bush as part of the “axis of evil.” ……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지난 화요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하여 냉전의 종식 이후 직면한 커다란 변화와 위협적인 상황에서 세계 속에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Smart power’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녀는 미국의 최대 위협은 대량 살상 무기가 테러리스트

트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핵 무기와 기술의 증식을 종식시키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고 현실에 기반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6자 회담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말하고, 또한 북한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으며 기간의 협상 과정은 면밀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클린턴은 (부시행정부가 악의 축이라고 칭했던) 북한과 미국의 양방 간의 접촉도 북핵 종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NKorea to crack down on markets to stem imports  
북한이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을 단속하다

-- 1월 15일 AP

출처: <http://www.google.com/hostednews/ap/article/ALeqM5h1eImIP7MTCW1jDB63NVL8ZY1spAD95MSO00>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has reportedly ordered a crackdown on street markets in an apparent move to reassert control over the economy amid an influx of foreign goods into the isolated country.

The authoritarian leader has ordered that all manufactured goods and imported items be sold at state-run shops rather than markets beginning this month, South Korea's Chosun Ilbo newspaper said.

Street markets have been allowed to spring up in communist North Korea in recent years, but officials are concerned about the infiltration of movies and music from the U.S. and South Korea into the reclusive country, analysts said.

"The growth of markets poses a threat to the North Korean regime," Park Hyeong-joong, a North Korea expert at the government-funded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old The Associated Press on Wednesday.

Defectors from North Korea say South Korean pop culture is gaining popularity in the North, with DVDs of films and television soap operas smuggled into the country from China. ……

In Seoul, a Unification Ministry official said he had heard about the crackdown but could not confirm the details reported in the Chosun Ilbo. An intelligence official said he knew about the crackdown but declined to elaborate. Both asked not be named because they were not authorized to speak to the media.

Park said a complete crackdown would be impossible to enforce because North Koreans rely on the markets to make a living.

……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국 상품을 통제하기 위해 노상 시장을 규제하고, 모든 상품을 국영 상

점을 통해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남한의 조선 일보는 보도했다.

노상 시장은 근래 북한에서 허용되어 왔으나 남한과 미국의 영화와 음악이 유입되어 북한의 관료들이 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탈북인사에 의하면 북한에서 남한의 DVD 영화나 연속극 등 대중문화가 중국을 통해 유입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남한의 통일부 관계자와 정보 관계자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대해 들은 바는 있으나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남한 통일연구원의 박형준은 노상 시장의 완전한 폐지를 북한의 시장 의존도를 봐서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總書記義弟を中心に…北朝鮮、集團指導体制を準備か 김정일 총서기 매제 중심으로 … 북한, 집단지도체제의 준비인가?

-- 1월 14일 요미우리신문

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健康悪化が伝えられる北朝鮮で、総書記に不測の事態が起きた場合をにらみ、長男の金正男(ジョンナム)氏を形式的元首とする、金一族と朝鮮労働党、朝鮮人民軍の3者による集團指導体制の構築が進められている模様だ。

米情報筋が明らかにしたもので、体制作りの中心人物は総書記の義弟、張成沢(チャンソンテク)労働党行政部長。後継体制は実質的に「張政權」となる可能性が増しているという。

張氏は金総書記の実妹、金敬姫(キムギョンヒ)氏の夫。米情報筋によると、張氏はこの縁戚(えんせき)関係を武器に総書記と密接な関係を築き、妻とともに金正男氏の後見人的な立場に納まった。さらに張氏の兄弟2人が朝鮮人民軍の最高幹部であることも利用し、軍部を掌握できる立場を固めたとされる。

김정일 총서기의 건강 악화가 전해지는 북한에서 총서기에게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장남인 김정남을 형식적 원수로, 김정일 일가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등 3자에 의한 집단지도 체제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보통에 따르면 체제의 중심인물은 총서기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후계 체제는 실질적으로 「장성택 정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장성택은 김 총서기의 친누이동생인 김경희의 남편. 미 정보통에 의하면, 장씨는 이 인척관계를 바탕으로 총서기와 밀접한 관계를 쌓아 아내와 함께 김정남의 후견인의 위치에 올랐다. 또한 조선인민군 최고 간부인 형제 2명을 활용하여 군부를 장악할 수 있는 위치도 굳힌 것으로 알려진다.

……

## 추천 논문

## 북한 경제체제의 복합적 딜레마와 미래 전망

권영경(통일연구원 교수)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주의 경제위기  
에 대응한 북한의 경제체제적 대응방식은 체제내적 개혁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제발전전략으로서 체제유지에 우선  
적으로 요구되는 선군경제 발전전략, 즉 국방공업우선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기존의 추격발전전략 기조를 여전히 유지  
하고 있는 가운데 계획적 조절과 시장적 조절로 이원화된  
경제조절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미 자생적으로 확장된 시장 위에 제도적으로  
공급된 시장은 계획경제공간을 축소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경제공간의 양적 확대를 초래하였다. 계획적 조절을 통  
한 공급의 제약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양적 확대는 계획경  
제 바깥뿐만 아니라 계획경제 내부에도 합법이라는 명분으  
로 확장되는 경제적 현실을 가져왔다. 추격발전전략으로 채  
택된 선군경제 발전전략은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이원화 전략은 '21세기 자력갱생' 논리에 의해 실질적 개방  
효과도 초래하지 못했다.

이러한 71조치 개혁 이후 나타난 북한경제체제의 딜레  
마는 필연적으로 기존 개혁의 성공을 위한 나선형적인 개  
혁의 지속을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  
국이 2005년 10월 이후 개혁 후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반응으로서 자원배분권과 개혁의 주도권을 갖  
고자 하는 기득권층의 대응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에서 개혁  
의 나선형적 전개는 제도적 모순 때문에 필연화 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라  
기보다 생존을 위해 개혁을 시작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체제 내적 개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결국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시장의 자기활  
성적 운동에 지배되면서 체제전환적 개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체제전환적 개혁으로의 연결은 급진적일 수도 있  
고, 점진적일 수도 있으며, 양자를 결합한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 이는 개혁을 실행하는 정치권력의 구조와 권위,  
안정성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경제체제는 안보위기의 해소, 수준 및 포스트-김정일  
권력구조의 형태에 따라 선군개혁개방 시나리오 혹은 시장  
지향적 개혁 시나리오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전자의 방식은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제약 요소가 많아 저개발경제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자의 방식도  
포스트-김정일 체제를 포함하더라도 개혁리더의 역할이 많  
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양 시나리오 어느 것이든 개혁이 더욱 확장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개입의 필요성을 서서히  
공감하는 현 국제정세로 볼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도 있다. 미흡한 개혁일지라도 국제협력시스템이 가동한다  
면 성공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북한의 내부개혁 확대로 개방을 진  
전해가야 하겠지만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개방을 확대하도  
록 함으로써 내부개혁이 압박을 받도록 하는 역순의 노력  
도 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간하는 『수은북한경제』 2008년 겨울  
호에 실릴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oreaexim.go.kr/kr/file/publication/02\\_논단\(2008겨울호\)\\_북한경제체제의복합적~.pdf](http://www.koreaexim.go.kr/kr/file/publication/02_논단(2008겨울호)_북한경제체제의복합적~.pdf)에서 보  
실 수 있습니다.)

2009년 己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겨레사랑 『2009년 남북한 통일달력』 제작, 독자들에게 드립니다

(주)겨레사랑에서 『2009년 남북한 통일달력(탁상용)』을  
만들었습니다.『주간 북한경제 동향』 독자님들 중 달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master@dprkinvest.org](mailto:master@dprkinvest.org))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www.krlove.net](http://www.krlove.net) -사진자료실에서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